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이건 못 좁힌 '28시간'... 정부·법원 손에놓인 파업 공방

중노위, 조정안 없이 절차 종료  
노조 "추가 대화 없다" 강경  
정부,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

20일 가처분 판단이 분수령  
21일 총파업 명분·동력 가를 듯  
장기화 땀 반도체 수율 부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삼성전자의 노사간 사후조정 절차가 13일 청와대가 노사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파업 막기'에 정부가 본격 나섰다. 법원도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를 오는 20일까지 내놓을 예정이어서 파업공방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임단협 사후조정 회의는 전날 오전 10시 시작해 이날 오전 2시53분까지 약 17시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1·2차 회의를 합산하면 28시간을 넘긴 마라톤 협상이었다. 중노위는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조합 삼성전자지부(삼성전자 최대노조) 위원장은 결렬 직후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결렬을 선언했다"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2024년 성과급이 0

원이었다"며 "고통은 분배하면서 열매는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거부한 중노위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EVA 기준 OPI(초과이익성 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DS부문에 한해 OPI 초과분의 영업이익의 12%를 특별경 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지급 조건으로 '2026년 매출·영업이익 국내 1위(SK하이닉스 대비 우위)'를 달아 외부 요인을 성과급 기준으로 삼은 데다 DX부문 성과급 상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1등 기업인데 왜 2등 기업과 비교해 성과급을 정하느냐"며 "일회성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노

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제도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즉각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도 지시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발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제도로,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역대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이후 네 차례로 모두 조선·항공업종에 한정됐다. 이번 삼성전자 파업이 AI 반도체 공급망을 이유로 적용한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결렬 이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변수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파업 자체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인용 여부가 파업의 명분과 동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심문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수성과 성과급 요구가 쟁의행위의 법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은 정식 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크기 전에 일단 막고 시작하지는 취지"라며 "인용과 기각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

분이 인용될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어서 파업 명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인정받는 셈이 돼 총파업 동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도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일부 인용되더라도 파업에 문제없다"고 맞섰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파업 참여 동참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여명이다. JP모건은 18일간 파업 시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9000만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실제 피해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측은 전담 조직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웨이퍼 공정 자체는 자동화가 잘 돼 있어 단기 파업으로 라인이 바로 멈추지는 않는다"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공백으로 수율 저하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강유정 "노사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수석대변인)

사후조정 종료에도 파업 전 대화 여지 청와대, 긴급조정권 발동엔 말 아껴

청와대는 13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사후조정이 종료된 건 했지만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노사 대화에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날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

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부터 금일 새벽까지 진행되었던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 총리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의 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중금리 대출 확대 압박... 시중은행·인뱅 '역할분담' 신경전

대통령실, 은행권 공공성 강화 주문  
5대은행 1분기 공급액, 인뱅 웃돌아  
KB국민, 카카오뱅크와 격차 축소  
NPL·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우려  
당국 취급비중 상향에 부담 쟁점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둘러싸고 금융업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시스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둘러싸고 금융업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은행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며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지원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는 누가 더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

기 5대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7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7650억원보다 310억원 많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3068

억원으로, 카카오뱅크(4500억원)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포용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리스크 부담을 누가 더 감내할 것인지를 두고 업권 간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은 위험가중치(RW)가 높은 중저신용대출 확대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지원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실채권(NPL)비율은 지난해 말 0.28%에서 올해 1분기 0.34%로 올랐

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도 0.28%에서 0.30%로, 하나은행도 0.35%에서 0.37%로 상승했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포용금융 역할을 확대해온 만큼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2~34%대를 유지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34.9%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32.5%, 카카오뱅크 32.1% 순이다. 신규 취급 비중 역시 금융당국 기준인 32%를 웃돌았다. 토스뱅크는 48.8%, 카카오뱅크 35.7%, 케이뱅크 34.5%를 기록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연체율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토

스뱅크는 지난해 1.11%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0.6%, 카카오뱅크 0.51%를 기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35% 이상으로도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이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시중은행 역시 정책금융과 기업대출 부담을 함께 안고 있다"며 "단순히 어느 한 업권에 부담을 집중시키기 보다 균형 있는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